

건강 칼럼

점점 사라져가는 행복한 기억, 치매는 어떤 질환인가

급 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는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존재가 되었다. 중앙차미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8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25년에 이르면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게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인데, 치매라는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치매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고등 정신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질환을 말한다. 하지만 치매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 손상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은 80~90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볼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



신종화

광명21세기병원 원장

의 약 5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국내 환자가 약 30만 명 정도인데, 이중 절반 정도가 해당 질환으로 인한 치매일 것으로 추정된다.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출증에 의한 치매이며,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절을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인지 기능 장애 중 초기에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기억 장애가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최근에 나온 대화의 내용, 일 등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예전 기억은 잘 유지되는데, 병이 진행될수록 옛날 기억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공간지각 장애도 보

이는데, 물건을 엄뚱한 곳에 두거나 본인이 가져다 놓은 물건을 어디다 놓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 밖에도 계산 장애, 실행증, 실인증 등이 나타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간단한 일조차도 헌신해내기 힘들어지게 된다. 행동 심리

증상 역시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의미 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불면증, 과식증 등의 증상을 보 이게 된다. 치매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거나 갑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지기능검사, 뇌MRI, 아포지단백을 포함한 피검사 등의 진단을 통해서 원인 질환을 파악한 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약물을 통한 증상의 완화하거나 병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 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비약물적 치료인 환경 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행동 치료, 특히 회상 치료와 같은 다양한 재활훈련 치료가 필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는 다양한 행동 정신 이상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치료한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취미 생활

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을 삶ا하는 것이 치매

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독자제언

스토킹법죄처벌법 제정,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장양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타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행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법죄처벌법 제정 전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범죄의 제효과가 미미했으나, 스토킹법죄처벌법(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9월경 시행 예정)의 제정으로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다.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스토킹법죄처벌법은 경찰이 범죄발생 전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분리 또는 세자 조치가 아닌 상당기간(최장 1 달)의 부작위처벌(접근금지 등)을 작업(사후 판나승인)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둔 최초의 처벌법으로 향후 선제적인 경찰권 행사의 핵심적인 근거법이 됐다.

또한 보호조치 절차상 경찰의 재량권도 한층 폭넓게 인정한 법률로서, 현장의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 보호조치 수단에 유지를 두고 우선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되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법 제정 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신고도 제대로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효적인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법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스토킹을 예방하면서 종범죄(스토킹법죄)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김선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수에즈 운하 좌초 선박 구난, 근 일주일째 이어져



28일(현지시간) 이집트 수에즈의 수에즈 운하에 화물선 '에버 기븐'(Ever Given)이 침몰해 있다.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에버 기븐'은 수로에서 개내기 위한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운하 관리 당국은 대형 예인선을 투입해 선체 부양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

전주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는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분향소를 지키는 사람은 열 명 남짓이다. 노동자들뿐 아니라 퇴직한 교수나 가정주부 등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다.

진상 규명의 핵심은 "왜 선원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고 놔두었는가".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구조를 하지 않은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통해 모두 드러났다. 구조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경 123정 정장 한 명만 처벌받았다.

그것도 불과 3년형을 살고 나왔을 뿐이다. 해경은 선원과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

물론 털출 시지도 하지 않았다. 배에 진입해 선원만을 구조하고 승객은 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청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뉘우개 확인됐다. 한미 당국자들의 확인이 있던 전에, 미국에서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군 당국에서 먼저 발표할 정도의 신각한 사건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여겨지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방부가 '평소와 다름없는 일'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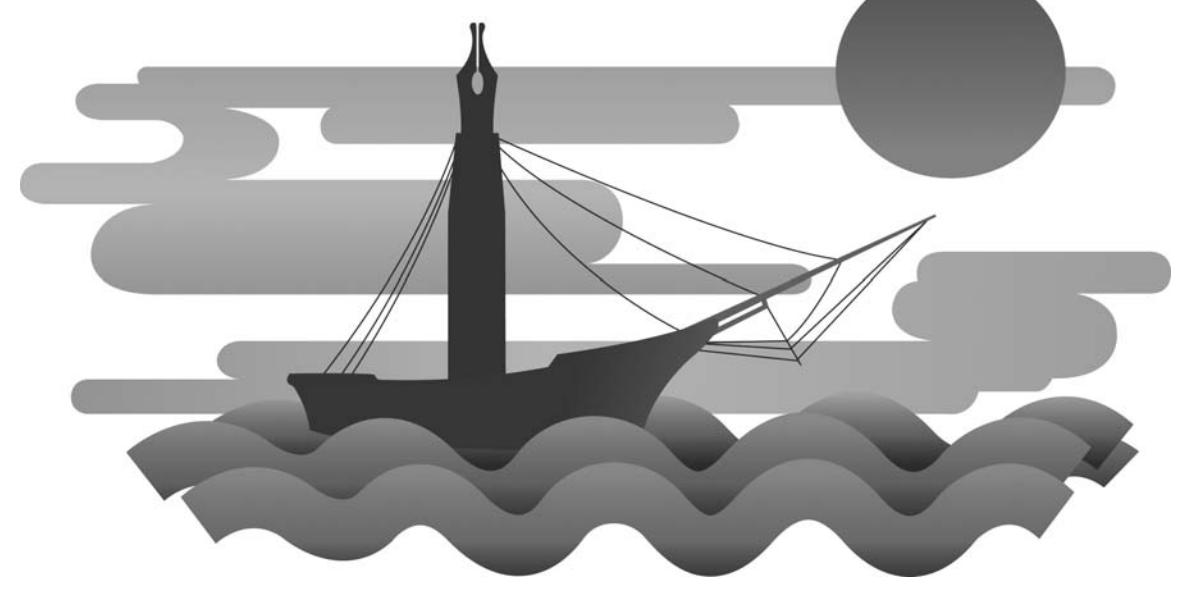
"문제가 될 만한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한 셈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입장이다. 미 당국자들은 오는 4월 중으로 그 동안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현안들에 대해 이제 막 벌을 내리다려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둘랄 변수들이 심각한 악재가 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석이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별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